

상생임금위원회, 이중구조 해소 토론회 개최

- 6월 발표할 『이중구조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학계·전문가 의견 수렴

상생임금위원회(공동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는 5월 23일(화) 14:00,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ESG 확산을 통한 접근 등 넓고 다양한 범위와 시각에서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한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64만원에 불과하다”며, “상생위에서는 이와 같은 격차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를 토대로 6월 발표 예정인 「이중구조 개선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임금체계 개편 관련 모든 과제를 종합한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 해답이 노동조합법 몇 개 조항 개정은 아니다. 개정안은 조직화된 대규모·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고, 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하여 오히려 진정한 약자보호가 소외되고 만다”면서, “정부는 지난 1년간 마련한 노동개혁의 기틀을 토대로 6월 중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하는 등 실질적으로 격차를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수진 (044-202-7740)
		담당자	서기관	구현경 (044-202-7741)
			사무관	송주현 (044-202-7745)

붙임 1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요

※ <상생임금위원회>

- ▲역할: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 해소를 총괄하는 사회적 논의체,
- ▲구성: 학계·현장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 총 22인,
- ▲운영: 2월 2일 발족 후 총 4회 개최

□ (일시·장소) 5.23(화) 14시, 정동1928아트센터(서울 중구 덕수궁길 130)

□ (논의사항) ❶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정책방향(노동研 성재민 박사)

❷임금격차 완화방안 모색(충남대 김기선 교수)

❸상생협력을 위한 ESG 확산(김&장 김동수 소장)

□ (좌장) 이재열 상생임금위원회 위원장

□ (토론) ▲박지순 교수(고려대), ▲이정민 교수(서울대),

▲한석호 사무총장(전태일재단),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경총),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 고용노동부 장관(상생임금위원회 공동위원장) 인사말씀

<토론회 세부일정(안) >

시간		내용	비고
14:00 ~ 14:05	5'	▶ 인사 말씀	고용부 장관
14:05 ~ 14:20	15'	▶ (발제1)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정책방향	성재민 박사
14:20 ~ 14:35	15'	▶ (발제2) 임금격차 완화방안 모색	김기선 교수
14:35 ~ 14:50	15'	▶ (발제3) 상생협력을 위한 ESG 확산	김동수 소장
14:50 ~ 15:00	10'	휴 식	
15:00 ~ 15:55	55'	▶ 자유토론	
15:55 ~ 16:00	5'	▶ 마무리 말씀	이재열 위원장

	발제 요지
(발제1)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박사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정책방향> ❖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 - 우리나라의 높은 불평등 수준(근속>산업·직업>사업체 규모>교육) - 길게 근속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적으나, 근속 간 임금격차는 높음 - 시간이 지날수록 대규모·정규직으로의 상향이동이 덜 활발해지는 경향 ❖ 이중노동시장 구조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 이중노동시장 완화가 주요 현안이 된 나라들은 주로 유럽 국가들,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문제라는 진단 하에 비정규직 재규제화 등 정책 흐름 나타남 - 기업 내 국한된 임금 인상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포괄한 대화 지원 등 정책적 노력, 사회적 보호제도 틀 밖의 영역을 틀 안으로 포섭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등 필요 -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 지속성과 확산을 위한 꾸준한 지원 중요
(발제2) 충남대학교 김기선 교수	<임금격차 완화방안 모색> 1. 공정하지 않은 노동시장: '격차사회' - 기업규모, 원·하청,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 존재 2. '격차사회'의 원인과 문제점 - 각 기업별 임금체계가 상이한 것이 주요 원인, 동일 기업 내에서도 고용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임금체계 적용 3. 임금격차 완화를 통한 공정노동시장 수립방안 -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 투명한 임금 정보 제공 방안 - 임금체계 수립 지원 (업종별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노사가 임금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중소기업 임금체계 수립 컨설팅 및 지원)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및 임금정보공개청구 제도 마련 - 사내하청 근로자 보호
(발제3) 김&장 ESG경영연구소 김동수 소장	<상생협력을 위한 ESG 확산> ❖ 최신 ESG 동향과 공급망 확산 -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급격하게 증가, 제도화 단계로 진입 ❖ 상생협력을 위한 ESG Agenda - 책임조달, 글로벌 공급망 이슈 - 플랫폼 노동자, 新 사회적 사각지대로 부각 - 국내외 기업의 인권경영 이행 및 공시 요구 증대 -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 중요성 강조 - 원청 vs 1차 → 1차 vs 2차 협력업체로 이중구조 논의대상 확대 필요 - 외국인 노동자 이슈

붙임 3

이재열 공동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

- **상생임금위원회는 ①임금체계 개편 확산과 ②임금 격차 해소를 통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논의, 제언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64만원에 불과, 연공성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임금 격차를 줄여 현대판 반상(班常) 차별같은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함
- **2월 발족 이후,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의 역사와 현황을 돌아보고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음**
 - 지난 16일에는 위원들이 반월·시화공단을 방문, 원하청간 임금격차 등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자·사업주 등의 의견도 수렴
 - 정책연구단 등에서는 임금격차 실태,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업종단위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해 4월 말 “업종별 표준직무임금체계 협의체”도 발족함
- **앞으로 상생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
 - 먼저,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해 업종단위 컨설팅 확대, 장려금·세제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 논의
 - 둘째, 임금체계 개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제 개선 검토, 임금정보 확충 및 노동통계 전문기관 신설 논의
 - 셋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제시하고,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연대 지원방안 논의
- **오늘 토론회는 임금격차 등 이중구조 실태를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제언을 논의하고자 개최함**
- **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이중구조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여 정부의 이중구조 개선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음**
 - 또한, 이후 임금체계 개편 확산 및 기반 마련 과제들을 종합하여 연내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발표 예정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 오늘 의미 있는 토론회를 열어주신 이재열 위원장님과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가 부족한 88%(중소기업·비정규직)로 나뉘어 있습니다.
 -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인지에 따라 일에 대한 보상과 보호 수준이 달라지고, 그 격차는 IMF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하여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지난 1년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 먼저, 비정규직, 청년 등 노동시장의 약자도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야근과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원하청 상생·협력 패러다임도 정부 주도, 일률적 재정 지원 중심에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 조선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원하청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인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생협약 체결이라는 의미있는 결실을 맺었으며,
- 앞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원하청 상생·협력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임금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인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논의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 미래세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시라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중구조는 노동시장의 법·제도·의식·관행과 원하청 간 생산성 격차 등이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복합적 문제로 그 해결방법 또한 결코 단순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에서 힘겨루기로 혼란스럽게 할 노동조합법 몇 개 조항의 개정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 개정안은 조직화 된 대규모·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 다수 미조직 근로자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될 우려가 큰 만큼, 노사 상생과 진정한 약자 보호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 대신 정부는 지난 1년간 마련된 노동개혁의 기틀을 토대로 노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격차를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중구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문가분들의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성재민 박사님의 노동시장 내 격차 통계 분석과 해외사례연구,
 - 김기선 교수님의 격차 원인 분석 및 제도적 해결책 등 발제를 통해 이중구조의 실태, 원인 및 개선방안을 두루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에게 협력·공급업체 등 공급망 전반의 근로자 처우 개선 노력을 요구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 김동수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실 「상생협력을 위한 ESG 확산방안」은 격차 완화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발제에 대해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 정부는 오늘 논의결과를 발전시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원하청 간 근로복지 격차 해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담은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6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